

신종 액상담배 청소년 흡연 확산 '비상'

USB와 흡사한 모양에 구별·단속 어려워 휴대 용이하고 냄새 거의 없어 유혹 증동

전자담배에 이어 최근 액상형으로 만들어진 담배가 속속 출시되면서 '청소년 흡연 확산'에 비상이 걸렸다. 일반 담배에 비해 액상형전자담배는 냄새와 담뱃재가 거의 없고, USB(이동식 저장장치) 메모리 스틱을 닮아 담배인지 구별조차 쉽지 않아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들에게 흡연욕구를 강하게 자극시킨다는 지적이다.

학부모들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이같은 특성 때문에 아이들이 흡연에 노출되지 않을까 불안감을 휩싸여있다.

4일 광주지역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미국 전자담배시장에 돌풍을 몰고 온 A업체의 액상형 전자담배가 지난달 말 출시되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 담배는 액상 니코틴을 가열해 연기로 바꿔 흡입하는 방식으로, 망고나 사과 등의 과일향이 첨가됐다. USB를 연상시키는 액상형기기는 별도 버튼이나 스위치가 없고, 일반 켈런담배에서 나오는 냄새도 없어 사용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담배인지 알아보기 쉽지 않

고 냄새도 덜 난다는 점이 청소년 흡연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학교에서 단속 또한 쉽지 않아 빠르게 보급될 가능성이 크다.

흡연을 하고 있다는 고교 2년 정 모군(18)은 "최근 출시된 A브랜드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소지하기 편하고, 담배갑에도 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며 "무엇보다 담배냄새가 거의 없어 마음 편하게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기는 흡연을 하는 청소년뿐 아니라 담배를 태우지 않는 학생들까지 흡연욕구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비흡자인 신 모군(17)은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에 한번 해보고 싶

다는 생각을 했다"며 "일반담배는 연기나 냄새 등으로 거부감이 있는데 액상형 담배는 피우고 싶은 충동이 크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둔 박 모씨(42)는 "액상형전자담배 기기를 보니 사프심이나 USB 같은 느낌이 들어 담배 피우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다"며 "담배냄새도 안나고 액세서리처럼 생겨 아이들이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관계당국은 액상형전자담배 출시로 청소년 흡연이라는 문제점이 불거지자 편의점 등 판매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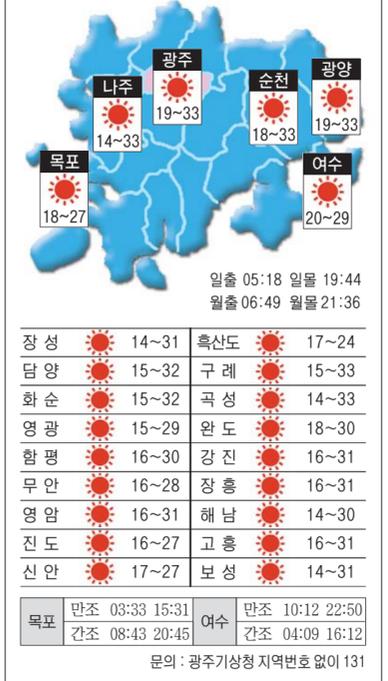
그러나 유통업체 1차 판매는 걸러내

도 소비자들간 온라인 판매 및 중고거래는 사각지대에 놓여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해외직구를 통해 액상형전자담배 거래가 가능하고, 중고거래사이트에서도 버젓이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현행 온라인 거래는 미성년자 여부와 상관없이 주소와 계좌번호 교환 후 계약이 성사돼 청소년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액상형전자담배는 다양한 향이 첨가돼 비흡연 청소년들에게도 거부감이 덜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청소년에게 급속도로 퍼질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제재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광민 기자

오늘의 날씨



광주·전남 타워크레인 103대 점거 농성

지역 건설노조, 안전대책·성실교섭 촉구

광주·전남지역 건설노동자들이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타워크레인 점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라 타워크레인지부에 따르면 노조원들은 전날 오후 5시부터 광주·전남지역 건설현장 48곳(광주 26곳·전남 22곳)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103대를 동시 점거하고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은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는 장비"라며 "지난 2014년부터 건설기계로 정식 등록되기 시작한 소형타워크레인은 명확한 제원기준도 없어 불법개조를 하

고, 허위등록돼 건설현장에서 쓰이고 있다. 더욱이 국가자격 없이 20시간 교육만으로 허가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장비를 운행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임금·단체협상 교섭과정에서도 사측은 임금동결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요구사항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며 "사측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하고, 정부는 노동자 안전을 위해 소형 타워크레인을 철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점거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중찬 기자



대테러종합훈련 4일 오후 광주 영주종합체육관 광장에서 열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테러종합훈련에서 광주시 시민재난안전추진단원들이 화재상황에서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있다. /김태규 기자

'사약' 독초 끓여 먹은 70대 숨져

민간요법으로 독성약초를 끓여먹은 7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50분께 서구 쌍촌동 한 주택에서 양 모씨(75)가 쓰러져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양씨는 월남전에 참전한 고엽제 피해자로 '손발이 저리다'며 어릴 적 부모님이 민간요법으로 사용하던 초오가 생각나 이날 처음 끓여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시대에 사약재료로 독성이 강한 만공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마비·어지럼증·호흡 곤란·중독 증상 등 부작용이 심해 의학계에서도 사용을 자제하는 약재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한 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김중찬 기자

병원 응급실서 난동 50대 입건

목포경찰서는 4일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25분께 목포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는 간호사 B씨(43)를 폭행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0시 51분께 목포시 죽교동 한 호텔 앞에서 만취상태로 쓰러져 잠을 자다 이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응급실에서 잠을 깬 A씨는 의료진을 향해 욕설하며 난동을 부렸고, 자신을 제지하는 의료진을 향해 폭언 하다 B씨를 밀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목포=김동균 기자

광주 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가족생계비 표준 50% 미만... 대기업 책임 다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 가 4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기자회견에 동참,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날 오후 광주 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은 대통령 공약

을 넘어 당시 모든 대선후보가 합의한 사회적 약속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 국제기준인 ILO(국제노동기구)와 UN이 권고한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이다"면서 "지난 2년 동

안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주장과 달리, 지난해 기준 가족생계비는 표준의 50%에도 못미치며, 1인 가구 생계비는 표준의 75% 수준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침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짐승뿔대던 것이며,

국내·외 연구들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들은 제조업 고도화와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원·하청 단가를 낮추기 위해 최저임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하청업체 노동자의 피담으로 원정업체의 이윤을 높여겠다는 속셈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또 "대기업이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가맹점 수수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제도 등 최저임금 인상비용 분담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대기업이 책임있게 분담하도록 모든 행정조치를 다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제와 연동한 대기업 최고경영자·최고임금제 도입을 요구했다. /김중찬 기자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

함께해요 청년창업!

청년의 열정을 복구가 응원합니다.

청년도약! 예비창업가에서 성공강소기업으로

청년창업 종합 지원 시스템

청년창업이 뿌리내릴 토양마련

청년창업이 움트도록 영양공급

청년창업이 열매 맺을 생태계 조성

광주광역시북구 | 일자리정책과 T. 410-6578
GWANGJU CITY BUK-GU